

“경총은 불법파견 반성문이나 내라”

경총,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대법 판결 탄원서 제출...신규 채용 제한, 인건비 감축 시도 협박

현대기아자동차그룹(회장 정몽구)이 20여 년 동안 저지른 불법파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경영계가 불법파견을 허용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금속노조는 “경영계는 그동안 저지른 불법파견 반성문이나 내라” 라고 규탄했다.



금속노조는 7월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현대·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소송 관련 경영계 탄원서 규탄과 조속한 대법원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조속한 불법파견 판결 ▲정규직 전환 ▲정몽구 회장 구속 등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아래 경총)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

업협동조합과 함께 7월 4일 대법원에 “도급 활용의 문이 닫히면 제조업 성장의 길도 막힙니다”란 제목의 탄원서를 보내 “수많은 중소·영세기업과 대기업이 공생의 길을 걸으며 기업 생태계를 성장시켜 왔다”면서 “하급심 판결에 따라 비효율성이 발생하면 기업생태계가 파괴되고, 제조업 성장의 문이 닫히게

될 것이다” 라고 협박했다.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은 현대기아차그룹의 일개 부서에 불과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만한 중소기업이 아니다”라며 “이 사건에서 중소기업과 공생 운운하는 주장은 사건을 호도

하는 행위” 라고 꼬집었다.

유홍선 노조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장은 “대법원 판결이 미뤄져 불법파견 노동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라고 규탄했다.

대법원은 7월 22일 기아자동차 사건을 시작으로 심리불속행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민사 1·2부에 사건을 배당하는 등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금속노조 울산 동진지회, 현대글로벌비스 맞서 승리

18일, 지회-동진오토텍 의견일치...공장 정상 가동·조합원 전원 고용 보장 등 합의

현대자동차그룹 현대글로벌비스 차원의 노조파괴로 사실상 해고 상태이던 금속노조 울산지부 동진지회(비상대책위원장 김태균, 아래 지회) 조합원들이 석 달 만에 공장으로 돌아간다.

동진지회와 동진오토텍은 7월 18일 ▲공장 정상 가동 ▲조합원 전원 고

용 보장 ▲합의 체결 즉시 미지급 임금 지급 ▲민·형사상 고소·고발 상호 취하 ▲구속자 석방과 선처를 위한 사측 탄원서 제출 등에 합의했다.

김태균 지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조합원 전원 고용 보장과 구속자 문제에 대해 우리 주장을 끝까지 관철했다” 라며

“이번 합의가 끝이 아니다. 현대글로벌비스의 노조파괴 시도에 항상 대비하고, 더 많은 현대글로벌비스 하청업체 노동자를 조직화하겠다” 라는 계획을 밝혔다.

지회와 동진오토텍은 7월 20일 조인식을 연다.

“문재인 대통령, 노조파괴 공범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과 신현수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즉각 해임을 요구했다. 지회는 신현수 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전문위원 등 다섯 명을 형법 155조 증거인멸죄로 형사 고소했음을 밝히고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갑을오토텍지회, 박형철·신현수 해임 촉구...김앤장 변호사·전문위원 증거인멸죄 고소

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노조파괴 공범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과 신현수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즉각 해임을 요구했다. 지회는 신현수 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전문위원 등 다섯 명을 형법 155조 증거인멸죄로 형사 고소했음을 밝히고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갑을오토텍지회는 7월19일 청와대 앞에서 ‘전관예우, 거짓변론, 증거인멸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공범 신현수 국정원 기초실장,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해임 촉구, 형사고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재현 지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노조파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노동존중 사회건설 공약은 거짓”이라고 청와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갑을오토텍지회를 대리하는 김상은 변호사는 “대표이사 박효상은 압수수색을 대비해서 2014년 4월 14일 저녁 7시 55분쯤 권기대 전 노무부문장에게 ‘모든 카톡 문자는 지우세요 전화로 합시다’ 라는 지시를 내렸다”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권 전 노무부문장은 ‘다 정리하고 있다. 김앤장과 지시하신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고, 전 노무부문장과 김앤장 변호사 사이 의사소통은 박효

상의 증거인멸 지시 전후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으로 임명된 박형철은 2015년 갑을오토텍이 용병을 동원한 범죄행위 당시 대전고등법원의 공안검사로 재직했다. 박형철은 2016년 2월 검사직 사직 후 갑을과 계약을 맺고 노조 파괴 시나리오대로 진

행한 범죄행위를 정당화 하고 지회의 쟁의행위를 불법화 하는데 앞장섰다.

국정원 기초실장에 임명된 신현수는 갑을로부터 거액의 수입료를 받았다. 신현수는 갑을이 노조파괴 혐의로 고소고발 돼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자 증거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기로 공모했다. 카카오톡 메시지와 휴대폰 문자로 증거인멸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노조파괴 모두 유죄판결...심종두, 김주목을 엄벌하라”

18일, 창조컨설팅 핵심 주모자 엄벌촉구 기자회견...지난해 6월 노무사 활동 재개해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노조파괴를 저지른 사용자들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노조가 설립인가 취소로 폐업된 창조컨설팅 대표 심종두와 전무 김주목을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7월 1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노조파괴 범죄자 창조컨설팅 심종두, 김주목 신속 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노조파괴 악질 사용자들이 최근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자 사건 경과를 기다릴 이유가 없다”며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창조컨설팅 심종두, 김주목을 엄벌에 처하라”고 촉구했다.

창조컨설팅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법은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노조파괴를 저지른 유성기업, 발레오만도 사용자의 재판 경과를 본다는 이유로 2015년 첫 공판을 연 뒤 2년 가

까이 재판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 강기봉 발레오만도 대표이사가 최근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노조는 “다른 법원이 이들의 범죄행위를 명백하게 인정한 만큼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라”며 “심종두 같은 노조파괴 범죄자들이 아무런 반성 없이 또다시 활동을 재개하게 놔두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